

- ‘계속고용제도’ 대상자를 사업주가 노사협정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 체제를 폐지하고 대상기업 범위를 그룹기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2년 정기 국회에 발의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²⁰⁾
 - *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고령자를 희망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고용하는 제도로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를 포함.
 - * 이는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에 의해 2006년부터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던 것임.
- 2003년 10월에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가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
 - * ①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교부금 지급, ②고령자 등의 고용과 관련된 사업주에 대한 상담 및 원조, ③고령자의 직업생활설계에 필요한 조언 및 지도, ④장애인 직업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의 운영, ⑥장애인 고용 납부금 관련 업무(납부금 징수, 조성금 등의 지급, 장애인의 기능과 관련된 경기대회, 장애인 고용에 관한 강습·계발) 등
- 고령자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기금²¹⁾을 설립하여 희망자 전원이 65세나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고령자의 직업영역 확대 및 고용관리제도의 구축에 노력하는 사업자를 지원
 - * 동 기금은 고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경비의 3분의 1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대 500만 엔까지 장려하는 기금임.
- 2011년 10월에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거주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간병 및 의료와 연계한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 대상 주택’의 등록제도가 도입됨.
 - * 이러한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주택정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금융지원기구에 의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 厚生労働省, ‘高齢者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 2013.04.01.

21) 厚生労働省, ‘助成内容 定年引上げ等奨励金(高齢者職域拡大等助成金)’, 2012.04.